

# 더위로부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도, 건설현장·무더위쉼터  
찾아 긴급 현장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과 무더위쉼터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1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고운삼봉도서관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폭염 대응 실태를 살피고, 인근 원수계령로 당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직접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건설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완주군 부군수, 재난안전과장 등도 참석해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 김 지사는 “무더위에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물·그늘·휴식을 철저히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배려가 생명을 지킨다”며 폭염 대응 기본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원수계령로 당에서는 냉방기 작동 상태, 음용수 비치, 이용자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무더위쉼터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전선”이라며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1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고운삼봉도서관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폭염 대응 실태를 살피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고운 시간대 작업 중지·휴식 보장 당부  
무더위 쉼터 운영 상태 직접 확인… 취약계층 보호 강조

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 농촌 고령자, 복지사

설 등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추가 운영과 방방장비 점검·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완주=열재복 기자

##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1년 결산 담아

도의회 소식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여름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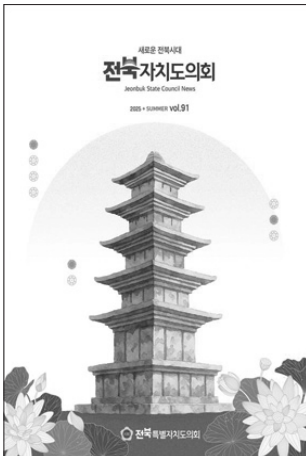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 11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여름호(제9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5~6월에 열린 제418회 임시회와 제419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과 함께 각 상임위의 생생한 현장 의정활동 등 도민 중심의 의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제·개정된 조례와 건의·결의문도 정리됐다.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 등 50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사법부의 대선 개입 규탄 결의 등 14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어든 시외버스 노선 회복 등 생활밀착형 정책 개선과 RE100 실현을 위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주택 도입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발굴 등을 다뤘다.

카툰의 경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최근 증가하는 야영 인구와 캠핑 문화 확산에 발



맞춰 야영장 품질 향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화 만들었다.

포토세이는 순창의 '용굴산 하늘길'을 담았고, 특별기고는 6·3 조기 대선으로 새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전북의 역사와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산후돌봄 지원 강화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원까지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산후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출산가정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와 한방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산후조리원까지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혔다.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1,834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아 도민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내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동부권에는 남원시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410㎡)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공

사가 진행 중이다. 서부권 정읍시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693㎡)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관련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북부권 익산시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모아복합센터와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 및 산후조리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산모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원과 정읍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각각 남원의료원과 정읍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해 분만 및 신생아 응급진료와 연계된 산후조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소방, 새내기 소방관 44명 임용… ‘도민 안전 지킴이로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임용식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임용자들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24주간의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이오숙 본부장 “사명감 갖고 도민의 생명 지키는 소방관 되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임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44명은 전북 도내 각 지역 소방서에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긍정적 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도-14개 시군, 탄소중립 협력체계 본격 가동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소통 간담회… 정책 연계·실행력 제고 위한 협력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와 14개 시군 간 탄소중립 정책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주관으로 처음 열린 정례 협력 회의다.

이날 행사에는 도 및 시군 탄녹위 위원장과 간사(도 탄소중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방안과 지역 간 협력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간담회는 도 탄소중립팀장의 진행 안내와 참석자 소개로 시작됐으며, 임성진 도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지역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과 협력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가 공유되었고, 각 시군은 지난 4월 수립한 자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발표하며 지역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도 차원의 지원책과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통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책적인 탄녹위 간담회가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실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도 탄녹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하반기 연 2회의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시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진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25년도 제276회 임시회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했고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연화 의원은 반복적인 근로자 채용 관행 등 군산시의 인사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논의·심의할 기구 구성과 채용과 실무에 관한 통합적인 지침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 차량과 운전원 확보, 아간운행 후 주간 미사용 차량에 대한 탄력적 활용 등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정보보고서의 전자문서 전환 및 회계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 명시 등을 제시했다.

환경보 의원은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군산시에 철저한 행정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비행장 단야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지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수산미래 전략 논의

도, 수산·양식 분야 전문가 참여 T/F팀 2차 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전북연구원에서 '수산·양식 기후변화 대응 T/F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산분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등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대응 T/F팀은 총괄반과 수산양식, 수산자원, 수산종자 등 4개 대응반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별 대응 전략과 제도 개선, 신규 사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해수면 상승, 해양 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방파제·선착장 등 해안시설의 보강과 함께 양식장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어선 보급, 해중립 조성 등 탄소 저감 대책이 주요 논의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청정어장 재생과 새로운 양식 품종 도입, 수온 관측 시스템 확대 등 양식장 환경 개선 방안이 제안됐으며, 어선 감축과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별 어획량 배분, 전북 연안의 수산자원 복원 사업 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바다포도(육당굴) 등 아열대 품종을 활용한 대체 품종 개발과 김의 육상양식 표준모델 구축, 지역특화 품종 육종 등 미래 대비형 양식기술 개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만호 기자

## 도, 휴가철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도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해수욕장, 관광지, 고속

도로 휴게소 등 여름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위생·청결 강화 △감염병 예방 △시설 탄력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만호 기자